

# 전남, 우주항공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 도전

## 누리호 성공·우주산업 인프라 활용…2026년 공모 참여 순천·고흥 490억원 투입…우주·항공 방산벨트 등 구축

전남도가 지역의 강점인 우주산업을 앞세워 정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본격 나선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키워겠다는 구상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에 6개 지역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에 3개 신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경남 창원(2020년, 시범사업), 대전(2022년, 드론), 경북 구미(2023년, 유·무인체계) 등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어 나머지 3곳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신규 클러스터 선정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 지역의 전략 산업인 우주산업을 연계한 ‘전남 우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방산 기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우주발사체·저궤도위성·항공 분야 기업과 소재·부품 산업을 묶어 방위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끌어올리는 ‘우주방산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역을 진행하며 중장기 전략을 정비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모 대응과 기업 지원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제도와 계획을 먼저 다져 공모 경쟁에서 후발주자의 약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지역 내 공장대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도 병행해 왔다. 전남도는 2024년 11월과 2025년 6월 순천과 고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우주·방산 연계 전략을 논의했고, 같은 기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 구축 지자체(대전·구미) 등을 방문해 공모 방향과 심사 기준을 파악했다. 순천·고흥 등 참여 지자체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국방벤처센터 등과도 7차례 협의회를 열어 역할 분담과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공모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전남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산·학 협의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도와 순천시, 고흥군, 순천대, 전남대, 국방연구 관련 기관 등 주요 주체 간 협약을 맺고, 참여 기업의 사업 참여 의향서도 확보해 공모 신청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핵심은 ‘우주항공+방산’ 결합이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우주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천시·고흥군 일원에 조성된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인근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순천의 소재·부품·정밀기계 기반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우주발사체, 저궤도 위성, 항공부품 등 방위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490억원 규모로,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45억원을 절반씩 매칭해 투입한다.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총괄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 지역사업단이 주관해 추진하는 구조다. 전남도는 이

재원을 활용해 시험·평가·실증 인프라 구축, 핵심 부품 국산화, 우주·방산 융합 기술 개발,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수출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우주 방산클러스터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인프라와 최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상징되는 기술력, 그리고 남해안권 항공·소재산업 잠재력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등 에너지·첨단산업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다.

전남도는 우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 산업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설계·시험·양산을 잇는 전주 기 기업 지원 체계가 갖춰질 경우 관련 기

업 집적이 가속화되고, 고급 연구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흥·순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축이 형성되면,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 중심의 기존 산업벨트와 함께 전남 전체 산업 지도가 입체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모 지점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자료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전남의 우주역량을 방위산업과 접목해 국가 전략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모형을 제시하겠다”며 “공모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우주·에너지·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전남만의 강점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제1회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에 참석해 시·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내년 초 출범 빠짐

### 도의회, 운영 예산 15억 삭감…시의회는 통과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됐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조직 출범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 하면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 15억원을 삭감했다.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해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 경비와 직원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 15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한 바 있다.

의원들은 광역의원 의원 구성 비율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했으며 11월 3일 열린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이 ‘반쪽’만 책정되면서 내년 초 예상했던 광역연합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광역연합 규약을 심의, 동의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승기·이현규 기자 sky@gwangnam.co.kr

##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70만원 인상

### 도의회 농수산, 첫 확정… 89억원 증액 6년만에 현실화

내년부터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는 최근 열린 2026년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연 60만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로, 6년간 동결됐던 수당의 첫 ‘현실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지만 현행 수준으로는 제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수산위는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결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위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규 기자

### ▶1면 ‘지선 6개월…’서 계속

거대 여당에 맞선 야권도 혁신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혁신 공전으로 호남지역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당은 광주·전남에서 20%대 정당 지지율과 광주 광역의원 2~3석, 기초의원 20%, 전남지역 4~5개 단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당지지도 20%’를 목표로 전체 선거구에 자당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전략이다. 광주에서만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지역구 1석, 비례 1석, 구의원 5석이 목표다.

또 내년 1월까지 지방선거 광주 정책 및 공약집을 준비하고,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정책 및 공약을 발

표할 예정이다. 진보당에서는 이종욱 전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요즘 여기저기 행사장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북콘서트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보면서 이제 정당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출마를 신중히 저울질하던 인사들도 속속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선거 열기는 더욱 달아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 본사인사

△김승주 命 총무국 차장  
△지세원 命 독자관리국 차장  
△차준관 命 사업국 차장  
△김태균 命 편집국 편집부 차장

〈2025년 12월8일자〉

#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의 달’…하루 3억6000만원 모였다

## 22개 시군·1000명 참여…현장 기부 575건 포함 2927건 연말정산·답례품 이벤트 확대…3년 연속 모금 1위 탄력

전남도가 최근 도청 윤선도홀에서 ‘제1회 고향사랑 기부의 달 특별 행사’를 열고 하루 동안 3억6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았다. 연말을 앞두고 기부 참여 분위기가 확산과 나눔 가치 확립을 위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 주관으로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으며, 도청·도의회·도교육청·도경찰청·소방본부 등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직원까지 1000여명이 동참해 제도 인식 확산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OX퀴즈와 SNS 인증 이벤

트, 시군 대표 답례품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기부 절차와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며 새로운 기부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평가다.

행사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부에 나서며 기부 문화를 제고했다.

현장 기부자들에게는 기본 답례품 외에도 추가 답례품, 행운권 추첨, 시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 기부 575건(6200만원)을 포함해 총 2927건, 3억

6000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돼 전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3년 연속 1위’ 달성을 향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기부자들은 “작은 정성이라도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를 통해 고향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연말정산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청년·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수도권 등 기부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전

남도 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선착순 2000명에게 전남 고품창감을 추가 제공하는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웰로, 액티부키(늘고팸),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 등 주요 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 정청래 대표 공약…리더십 타격 불가피 재적 과반 확보 실패…공천 료 개정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를 열고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료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

천 료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으며 오후 3시 마감됐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 대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lee235@gwangnam.co.kr